

# 광주 통합돌봄 문턱 낮추고 전남 공익수당 올린다

## 새해 달리지는 제도

새해 광주·전남의 생활정책이 '돌봄·양육'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고 한층 두꺼워진다.

광주는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은 넓히고, 아이돌봄·아동수당·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충 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동시에 강화한다.

전남은 농어민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도서지역 의료·출생지원·주거비 부담 완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린

## 시, 아동·아이돌봄 확대에 심야어린이병원 확충 도, 농어민수당 70만원·소상공인 지원 대폭 강화

다는 구상이다.

광주에서는 먼저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접근성을 높인다.

돌봄 서비스 내용도 넓어진다. 야식가정을 방문해 복약을 돋는 서비스가 새로 추가돼 고령층·민성질환자 등 복약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정책도 손질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해 부담을 낮춘다.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아

이돌보미 수당은 기존 1만500원에서 1만 1120원으로 인상해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안정성을 함께 겨냥했다.

아동 관련 지원도 '대상 확대+지원 상

향'으로 정리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세 넓혀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월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올린다.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해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공백을 즐기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확대된다.

다. 사구·광산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1곳을 추가 지정해, 새

해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3곳이 운영된다.

전남은 농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전면에 세운다. 전남은 새해부터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넓힌다. 셀·도서지역은 '찾아가는 의료' 성격을 강화한다. 도서 지역을

과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도 80세까지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비 경감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두텁게 손질된다. 노

란우산 공제 기여장려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폐기지 지원사업은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넓힌다. 셀·도서지역은 '찾아가는 의료' 성격을 강화한다.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어복 버스'를 운영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도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해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보강한다. 산도·신생아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여수·광양 2개소를 추가 개소해 총 7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국민기초 수급자가 2억원 미만 주택 계약을 체결 할 때 종개보수 실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토털 지도서비스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남 근해 해양 항공영상을 공개해 해양 정보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골목상권을 살리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1일 광주·전남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1913송정역시장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상인들이 형형색색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속도… 오늘 '통합 추진 선언'

강기정·김영록, 선언문 발표…행안부, '특별광역연합 규약' 승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구상이 두 광역단체장의 공식 선언과 정부승인이 이뤄지면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두 단체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 발표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

만, 참배 이후 같은 장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선언문에는 행정통합 추진의 기본 방향과 원칙,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0일 열린 실국장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답기구 구성을 시지했고, 1월 초 행정부지사·권한대행인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을 대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새해부터 양 시·도 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도 양 시·도의 통합 의지에 힘을 실었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달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31일 행안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했다.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술 입사생 725명 선발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원)생…2~16일 원서 접수

제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도 남도학술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

며,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술별로는 제1남도학술(동작구 소재)

302명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인 12월 31일 기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 이면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원서 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원서는 남도학술 누리집(https://www.ndhs.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호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

도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명기는 학교성적 30%,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정도 70%를 반영하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는 생활정도를 100%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하며 올해부터는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29여객기 참사 학생자의 자녀에게도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최종 입사생은 2월 3일 남도학술 누리집에 발표하며, 입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 예비자로 공개되고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한전KP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kps.co.kr

#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의 해…광주·전남 권력 구조 재편 시험대

▶1면서 계속 최근 총선과 영광·곡성· 담양 등지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행보도 관심사다.

조국 대표는 최근 광주를 찾아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정치적 역할이 크지만, 호남에서는 독점적 지위 속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했다"며 "조국혁신당이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광주·전남 통합론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 논의는 이제 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3 특'을 실행하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될 가능성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당선자와 무투표 당선 구조가 얼마나

나 원회될 수 있을지 여부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왔고, 일부 무소속과 소수 약당 당선자가 뒤를 이었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는 2022년 8명·2018년 5명, 2014년 8명, 2010년 7명에 달했다.

무투표 당선도 반복돼 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광주 1명, 전남 2명이, 광역의원은 광주 11명과 전남 26명이, 기초의원은 전남에서 7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매 선거마다 무투표 당선이 이어진 배경에는 민주당 공천자가 곧 당선자로 인식되면서 경쟁 후보가 나서지 않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역·기초지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도 변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에서야 민주당 9명, 국 민의힘 8명, 비례당 1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국 이번에도 지자 확정에 따른 '깜깜 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선거도 변 수다. 두 지역 모두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교조·노동·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와 '반 이정선' 연대의 단일화 성공 여부가, 전남에서는 김대중 교육감 체제에 맞서는 다자 후보군의 단일화 성과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